

211만명·450조 '농협대통령' 누가되나... 13명 출사표

〈조합원 수〉

〈총 자산〉

농협중앙회장 선거 D-28

영남권 5명, 호남권 3명 등 대의원 조합장 293명 투표
농협금융지주·경제지주 등 수십여개 계열사 CEO 권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

조합원 211만명은 물론 농협의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13명의 후보자가 뛰어 들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1일 실시하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13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문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농협중앙회가 사전 공개한 행사 장

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예비후보자는 ▲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앙자문위원 ▲강호동 합천 울곡농협 조합장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 조합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여원구 양서농협 조합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 ▲이주선 송악농협 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임명택 전 농협은행 인주로지점장 ▲천호진 전 농협북대공판장 사장 ▲최덕규 전 가야농협 조합장 ▲홍성주 봉양농협 조합장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 후보가 5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에서 3명이 나왔

다. 충청권과 경기도는 각각 2명씩이며, 강원권은 한 명이다.

중앙회장은 전국의 조합장 중 지역·품목별 대의원 조합장 293명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는다. 지역별 대의원 수는 경북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3명 ▲충남 37명 ▲경남 34명 ▲전남 34명 ▲전북 27명 ▲강원 24명 ▲충북 16명 등의 순이다.

아직 본 후보자 등록까지 보름 가량 남았지만 6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지난 23대와 비교하면 경쟁이 두 배 이상 치열해진 셈이다. 임기 4년 단임제에 비상임 명예직임에도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가 된 것은 실질적인 권한이 국내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211만여명의 조합원 대표할 뿐만 아니라 총 자산 450조원대의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등 수십여개의

계열사 인사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력에 비해 값싼 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선거가 한 달 남은 만큼 후보자들의 정책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후보자 토론회 등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협중앙회 홈페이지나 SNS 등 외에는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나마도 몇몇 후보는 정책제시도 하고 있지 않아 값싼 선거나 돈 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초 김병원 전 중앙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만료되지만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본 후보자 등록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이틀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새해 첫날 코스피 1%대 하락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져 2,180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0포인트(1.02%) 내린 2,175.17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에 김지형



법원 제시 3개 숙제 중 첫번째 완료
조직개편 등 특단의 대책 이어질 듯

삼성그룹이 법원의 첫번째 숙제를 완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꾸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재임 시절 주로 진보 성향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김

영관법으로도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도 불렸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사회갈등을 중재하는 일에 헌신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질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삼성전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도 김 변호사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장도 맡고 있다. 현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법조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6일 정준영 부장판사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

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받았었다. 업계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의 뜻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7일 4차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직 개편 등 특단의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부 감시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면, 과감한 혁신과 재벌체 폐해 시정 과제도 연말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재용 기자 juk@

방통위·과기부, AI 이용자 보호나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인종·성별 차별,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영상, 페이크뉴스(가짜뉴스) 등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AI 등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는 최근 AI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인공지능(AI)국에서 AI 시대의 윤리를 담은 윤리원칙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는 AI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크게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

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 두 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 조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1월 발표한 AI 윤리원칙인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 원칙은 현재는 기본 원칙 7개 문장으로만 구성된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해 협의회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이재용, 새해 첫 행보 '초격차' 현장 방문

(삼성전자 부회장)

화성사업장 반도체 연구소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초격차' 현장을 찾았다.

이 부회장은 2일 화성사업장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3나노 공정 기술을 보고 받고 DS 부문 사장단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를 반도체 개발 현장에서 시작한 것은,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비전을 다시 한번 임직원과 공유하며 목표달성 의지를 다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3나노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차세대 기술인 'GAA'를 적용해 완성할 수 있었다. 5나노 제품에 비해 칩 면적을 35% 이상, 소비전력을 50% 감소시키면서도 성능은 30% 빠르다.

이 부회장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을 확인하고 사업보고를 받았다. /삼성전자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자"고 사회 공헌 활동도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 1면 '입김 세진 국민연금'서 계속

25곳 주식가치 1조 넘어 재계 경영권 개입 불안감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식 가치가 1조원이 넘는 곳은 모두 25곳에 달한다. 2016년과 비교해 7곳 더 많아졌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들의 주식 평가액은 118조83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2분기 말(88조1625억원) 보다 34.8%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2019년 마지막 회의를 통해 황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기업가치와 주주권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적극적 주주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재계에선 불멘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쉽게 할 수 있어 대내외적인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스피 상장사인 P사 관계자는 "사실 국민연금이 경영 전문가도 아니지만, 기업의 경영권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은 혁신성을 훼손은 물론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태화 기자 avin@